

“새만금 태양광사업 ‘본말전도’”

유성엽 의원, “태양광을 위한 일 아니냐?” 질타... “정부, 절차와 기본 어겨 재고를”

민주당 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은 15일 오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남 참석 한 호남출신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북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설립계획은 새만금을 위한 일 아니라, 태양광을 위



한 일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질타했다. 유 의원은 어제 간담회에서 “해당 구역은 국제업무지구 등 땅이 만들어질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비록 수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태양광 판넬을 깔면 땅 매립이 가능하겠느냐, 그만큼 늦어지는게 아닌가”라며, “지금까지도 27년을 기다려왔는데 확정적으로 20년을 미루어서 47년으로 새만금 개발이 미뤄지는 것이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으나,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매립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계획된 태양광 발전 부지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하는 국제업무지구로서 태양광을 가설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고 강조하며, “절차와 기본을 어긴 일이고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만금 전체 1억2천만평 중 호수가 3,50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면 현재보다 3배나 더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하는 구역에 태양광을 가설하는 사업 계획 도면을 내 놓은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좋은 결론이 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정말 즉흥적으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은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잘못된 일이다”고 강조하며, “절차와 기본을 어긴 일이고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만금 전체 1억2천만평 중 호수가 3,50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면 현재보다 3배나 더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한국당 33억 등 중앙선관위 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5일 2018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4080만여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경상보조금 총 425억6000만여원을 모두 각 정당에 지급 완료했다고도 했다. 이번 지급된 경상보조금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129석) 33억5420만9000원 ▲자유한국당(112석) 33억2589만9000원 ▲바른미래당(30석) 24억2948만4000원 ▲민주당(14석) 6억2897만8000원 ▲정의당(5석) 6억6206만원 ▲민중당(1석) 2억3332만2000원 ▲대한애국당(1석) 6824만원 등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北 리종혁 방남 “역사적인 시각에 남녘 땅 밟게 돼 기쁘다”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 참석차... 김정은 서울 답방에 “두 수뇌부 결정할 문제”

리종혁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5명이 지난 14일 오후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경기도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



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당초 함께 방남할 예정이었던 김성해 아태위 실장과 김춘순 연구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리 부위원장은 “북남 관계가 전환적 국면에 들어선 역사적인 시각에 남녘 땅을 밟게 돼 우리 대표단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우리를 초청해주고 따뜻하게 맞이준 안부수 선생을 비롯한 아태평화교류 협회 관계자들과 경기도청, 고양시를 비롯한 유

관기관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리 부위원장은 남측 정부 관계자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은 (대표단과) 토론을 해봐야겠다”라고 밝혀 고위 당국자와 회동이 성사될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세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그것은 두 수뇌부들이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알과알부할 형편이 못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에 방남한 북측 인사는 리 부위

원장을 비롯해 아태위 소속 송명철 부실장, 조정철 참사 및 지원인력인 리용남 등 5명이다. 리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은 15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자율주행모터쇼 개막식과 화성시 농업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16일 오전 입진각을 찾은 뒤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석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21세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다. 북측 대표단은 오는 17일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뉴시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회계산업의 세월호 참사”

정동영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규명해야”

민주당 정동영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서 부풀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근거하여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평가한 것 역시 추가 감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 중 하나가 공정경제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 없이는 공정경제를 이룩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서 부풀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근거하여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평가한 것 역시 추가 감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 중 하나가 공정경제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 없이는 공정경제를 이룩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홍영표 “예산소위, 원내대표 간 논의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예결위 현 상황이나 (예산조정소위) 정수 조정은 원내대표 사이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



조정소위 정수 구성은 원내대표에게 공이 넘어간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비교섭단체를 절대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비교섭단체 의원이 현재 원내에 28명이다. 거기를 무시하고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의회에서 예산 관련 보고를 비롯해 이미 당원으로 발의된 ‘유치원 3법’ 추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보고도 이뤄졌다. /뉴시스

박경미 “한국당, 한유총과 같은 입장인지 밝혀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홍준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유치원연합회(한유총이)이 정부 공공성 강화 대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이를 위한 유치원 교육개혁을 계속 방해하면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만 보면 한국당은 유치원 개혁에 반대하는 한유총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불 수박에 얹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은 국민적 요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한국당 의원이 한유총과 개최한 토론회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성토장을 방불하게 했다”며 “한국당 의원은 법이 잘못 됐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뭐냐,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어 “한달전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았을 때는 바짝 앞도러 있다가 이제에서는 유치원 제도개혁에 반대하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정부 지원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을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대 비리 연발이 탄압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니는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법안이 어떻게 부당 탄압이 되느냐”며 “국민이 유치원 비리에 왜 분노하는지 한유총은 생각해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제11대 전주시의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 의회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실천 의회



<전주시의회 본회의>



<전주시의회 지방의회 체임교실(230-3731)>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 시민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전주시의회

http://council.jeonju.go.kr
(의정팀장: 230-3710, 의사팀장: 230-3720, 홍보팀장: 230-3730)

<방청안내 230-3713>

